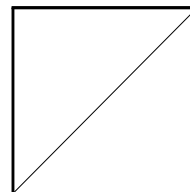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67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5. 13. (제 9 차)

의
결
사
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5. 13.

1. 의결주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검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도록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추상적인 제재사유의 구체화 등 제재 양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금융관련 검사 및 제재절차를 선진화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

검사·제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동법에 따른 제재 시 검사·제재규정의 절차 등을 적용받도록 함

나.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안 제14조)

검사종료후 검사결과통보시까지 소요되는 기간(‘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 초과 건은 금융위에 반기별로 총괄 보고토록함

다. 종합검사 실시 1개월전 사전통지 의무화(안 제8조의2)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사전에 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 실시 1개월전(현행 : 1주일전) 사전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대체수단(준법교육) 도입(안 제23조의2)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 경미한 위반행위(제재 양정상 '주의')에 대해 획일적 제재 대신 준법교육을 이수할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교육조건부 조치면제제도'의 근거 마련

마.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 당국이 제재양정시 반영
(안 23조, 26조, 별표2, 별표3)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에 따른 위법행위 처리 등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과징금·과태료 양정시 감경

바. 추상적인 제재사유를 구체화(안 제17조, 제18조)

'정상참작',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등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된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수 있도록 규정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규정변경예고(2020.1.23.~2020.3.2.),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소목 및 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주일전”을 “1주일전(종합검사의 경우 1개월전)”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독원장은 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종료 후부터 검사결과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180일 이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운영을 통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련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법률·회계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2.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3. 검사종료 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4.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 진행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5. 제재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6.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금융위 의결일(금융위가 금융위원장에게 제재조치 권한을 위임한 경우 동 제재조치의 결정일)
7. 기타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제재의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⑦표준검사처리기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불산입 기간 등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⑧감독원장은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검사 건에 대하여 그 건수와 각각의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종

료후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불산입기간을 포함한 경과일수가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불산입기간 및 주요 내용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가목 중 “그”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로, “비교적”을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를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을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정상참작”을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를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를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를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제재이전 퇴직자 포함)의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의 주의를 포함, 다만 감독자에 대한 주위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법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치 면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준법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 제목 “(기타 감독기관 조치의 반영)”을 “(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독기관”을 “감독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중 “부과기준율”을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2) 및 (3) 중 “30이내”를 각각 “50이내”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3 제3호나목 본문 중 “예정비율을”을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1) 중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을 “제23조 제1항에 의거”로 하며,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3 제4호나목(3) 및 (4) 중 “30”을 각각 “50”으로 한다.

별표6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4항 및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법 제14조의5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의무 위반)

- (1) 적용범위 : 법인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4의 2-나목의 경우)
- (2) 위반건수 : 모집된 신용카드의 수 (다만,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는 모집 위탁은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타인의 수)
- (3) 예정비율의 산정 : 위반의 동기(상·중·하)에 위반결과의 중대성(중대·보통·경미)을 감안하여 결정

※ 위반결과는 모집 유형별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모집질서 문란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건별로 판단

위반동기		상	중	하
위반결과				
중대	· 2개 이상의 불법모집 유형이 결합된 경우 · 연회비의 200% 초과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한 경우 · 모집위탁 및 타사카드 모집의 경우 · 허위·과장·왜곡·축소 및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길거리·방문 모집의 경우 · 인터넷을 통한 모집으로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모집의 경우 · 회원 모집의 대가로 타인에게 보수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모집의 경우	법정최고 금액의 100%	법정최고 금액의 80%	법정최고 금액의 60%
보통	· 연회비의 100% 초과 또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한 경우	법정최고 금액의 80%	법정최고 금액의 60%	법정최고 금액의 40%
경미	· 연회비의 100% 이하 또는 2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한 경우 · 자발적 불법모집 중단* 등	법정최고 금액의 60%	법정최고 금액의 40%	법정최고 금액의 20%

* 모집권유 및 카드발급신청서 수령 이후 동 신청서를 자발적으로 카드사에 접수하지 않고 폐기·반환하는 등 적극적 시정노력을 한 경우

- (4)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모집인의 등록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수입이 2.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월 평균수입 2.5백 ~ 3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정금액의 20%를 감경한다
- (5) 과태료 부과 당시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감경하되,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의2)의 과태료 감경대상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나)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중인 자. 다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검사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 가. ~ 보. (생략) <u><신설></u> <u><신설></u> 2. ~ 20. (생략)	제3조(정의) ----- ----- ---. 1. ----- -----. 가. ~ 보. (현행과 같음) <u>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u> <u>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u> 2. ~ 20.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검사의 사전통지) 감독원장은 제8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 사전예고통지서를 당해 금융기관에 검사착수일 <u>1주일전까지</u>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제8조의2(검사의 사전통지) ---- ----- ----- ----- ----- ----- <u>1주일전(종합검사의 경우 1개월전)</u> ---. ---- ----- ----- ----- ----- -----.
제14조(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① ~ ④ (생략)	제14조(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⑤ 감독원장은 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종료 후부터 검사결과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180일 이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운영을 통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련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법률·회계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2.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3. 검사종료 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4.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 진행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5. 제재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6.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금융위 의결일(금융위가 금융위원장에게 제재조치 권한을 위임한 경우 동 제재조치의 결정일)

<신 설>

<신 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기타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제재의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⑦표준검사처리기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불산입 기간 등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⑧감독원장은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검사 건에 대하여 그 건수와 각각의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종료후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불산입기간을 포함한 경과일수가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불산입기간 및 주요 내용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

-----.

<p>1. ~ 6. (생략)</p> <p>7. 기관경고</p> <p>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u>비교적 가벼운 경우</u></p> <p>나.·다. (생략)</p> <p>8. 삭제</p> <p>9. 기관주의</p> <p><u>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u></p> <p>② (생략)</p> <p>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p>가. -----</p> <p>---- <u>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u></p> <p>-- <u>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u> --</p> <p>나.·다. (현행과 같음)</p> <p>9. -----</p> <p><u>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p> <p>-----</p> <p>-----</p> <p>-----</p> <p>-----</p> <p>-----</p> <p>-----.</p> <p>1. -----</p> <p>-----.</p>
--	--

가. (생략)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
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
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
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 바. (생략)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

가. (생략)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생략)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
교적 가벼운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
작--

3. (현행과 같음)

4. -----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
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
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
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 ⑥ (생략)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

-----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제재이전 퇴직자 포함)의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의 주의를 포함, 다만 감독자에 대한 주의

제26조(기타 감독기관 조치의 반영)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 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감면할 수 있다.

제47조(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제재의 특례)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

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법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치 면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준법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
감독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

-----.

<삭 제>

하고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
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동
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 개선 또는 직무정지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대출
등을 취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
행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
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4조 제5항부
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검사부
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p> <p>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생략)</p> <p><부과기준율표> (생략)</p> <p>※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u>부과기준율을</u>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p>	<p><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p> <p>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현행과 같음)</p> <p><부과기준율표> (현행과 같음)</p> <p>※ ----- ----- ----- ----- ----- <u>부과기준율에 10%를</u> <u>가감하여 비율을</u> ----- -----. -----.</p>
<p><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p> <p>5. 다. 감경사유 및 비율</p> <p>(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u>100분의 30</u>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u>100분의 30</u>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신설></p>	<p><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p> <p>5. 다. 감경사유 및 비율</p> <p>(2) ----- ----- ----- - <u>100분의 50</u>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3) ----- ----- ----- ----- <u>100분의 50</u> ----- -----.</p> <p>(8) <u>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u></p>

	<p><u>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u></p>
<p><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p> <p>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u>예정비율</u>”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u>예정비율</u>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p>	<p><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p> <p>나. ----- ----- ----- ----- ----- <u>예정비율</u>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 -----.</p>
<p><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4. 나. 감경사유</p> <p>(1) <u>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u></p> <p>(2) (생략)</p> <p>(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u>예정금액의 100분의 30</u>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u>예정금액의 100분의 30</u>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4. 나. 감경사유</p> <p>(1) <u>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u>----- ----- ----- ----- ----- <u>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u>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2) (현행과 같음)</p> <p>(3) ----- ----- ----- ----- <u>100분의 50</u> ----- -----.</p> <p>(4) ----- ----- ----- <u>100분의 50</u> ----- -----.</p>

<별표 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4항 및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법 제14조의5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회원모집시 금지 의무 위반)

- (1) 적용범위 : 법인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4의 2-나목의 경우)
- (2) 위반건수 : 모집된 신용카드의 수 (다만,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는 모집 위탁은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타인의 수)
- (3) 예정비율의 산정 : 위반의 동기(상·중·하)에 위반결과의 중대성(중대·보통·경미)을 감안하여 결정

※ 위반결과는 모집 유형별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모집질서 문란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건별로 판단

위반결과 \ 위반동기		상	중	하
중대	· 2개 이상의 불법모집 유형이 결합된 경우 · 연회비의 200% 초과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한 경우 · 모집위탁 및 타사카드 모집의 경우 · 허위·과장·왜곡·축소 및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길거리·방문 모집의 경우 · 인터넷을 통한 모집으로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모집의 경우 · 회원 모집의 대가로 타인에게 보수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모집의 경우	법정최고 금액의 100%	법정최고 금액의 80%	법정최고 금액의 60%
보통	· 연회비의 100% 초과 또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한 경우	법정최고 금액의 80%	법정최고 금액의 60%	법정최고 금액의 40%
경미	· 연회비의 100% 이하 또는 2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한 경우 · 자발적 불법모집 중단* 등	법정최고 금액의 60%	법정최고 금액의 40%	법정최고 금액의 20%

* 모집권유 및 카드발급신청서 수령 이후 동 신청서를 자발적으로 카드사에 접수하지 않고 폐기·반환하는 등 적극적 시정노력을 한 경우

- (4)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모집인의 등록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수입이 2.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월 평균수입 2.5백~3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정금액의 20%를 감경한다
- (5) 과태료 부과 당시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감경하되,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의2)의 과태료 감경대상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 (나)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중인 자. 다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제재심의국 감독총괄국
연 락 처	02-2100-2824	02-3145-7821 02-3145-8010